

벤처규제 푼다더니... 중기부 1호법안부터 국회에 발목

빛 못보는 벤처투자 촉진법

올 벤처투자액 4조원 돌파 전망
벤처투자 촉진법 여야 이견 없는데
민생·추경에 밀려 3개월간 제자리

벤처투자액이 올해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계속되는 정치권의 공전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 촉진법)은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정법 중에선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이지만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빛을 보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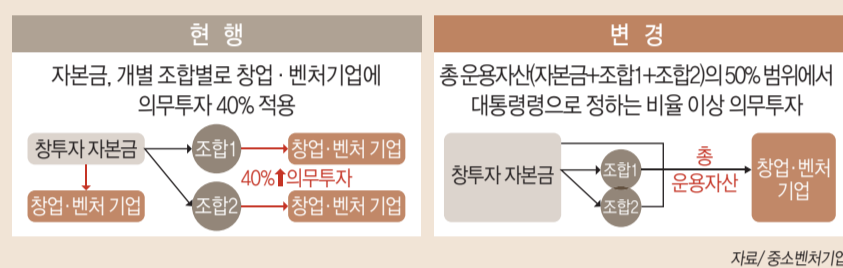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지난 4월 취임 이후 정치권 등에 벤처투자 촉진법 통과 의당성을 여러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기부가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6월 국회에 제출한 벤처투자 촉진법은 소관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올해 3월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벤처캐피탈 업계에선 벤처투

벤처투자촉진법 주요 내용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법 개선)	
운용주체	현행 운용주체에 액셀러레이터, 증권사 등 추가 *단, 증권사등은 기존운용주체와 Co-GP인 경우만 허용
최소결성	20억원
결성방법	등록제
창업투자 의무	총 자산 규모별로 의무비율 차등화 *자본금+ 펀드총액 → 펀드총액이 클수록의무비율낮음
해외투자	제한없이 가능
중견기업 투자	투자 가능
투자금지 업종	사행산업, 미풍양속 저해 경우만 포괄적으로 금지
투자방법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
모태출자	모태조합 출자없이 펀드 결성 가능
책임성 강화	연대보증 요구, 반복적 규정위반 → 등록 취소
기타	SPAC 투자 명시적 허용, Fund of funds 설립 가능



자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다양한 투자 영역이 생기면서 벤처투자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1986년에 제정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법)과 1997년 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법)이 벤처투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대흐

름에 뒤쳐진데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투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법이,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은 벤처법이 각각 관장하는 등 이원화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벤처투자조합만 운용하던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새로 결성, 숙박업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했지만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벤처투자조합(벤처법)에선 허용하던 숙박·음식점업 투자를 창업투자조합(창업법)은 '금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한 관계자는 "융합을 통해 의료와 ICT가 헬스케어로, ICT와 금융이 핀테크로 탈바꿈하는 등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벤처투자를 아우르는 법이 없는 이들 산업에 적기 투자가 힘들고, 후속투자도 한계가 있어 온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벤처투자 촉진법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자금 유입 촉진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 명시적 허용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신설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일원화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촉진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창업법과 벤처법에서 '벤처투자' 관련 내용만 추린 것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상반기에 민생법안과 추경에 집중하고, 때때로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순위가 밀려 관련법이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조632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 1조8996억원으로 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게다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의 투자액이 지난해 전체투자액(3조4249억원)의 55.5%를 기록한 터여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체 투자액이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태풍피해 응급 복구현장 돕는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 농민들과 함께 시설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향후 전망도 '우울'

한은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
2019~2020년 2.5~2.6% 불과

"저출산·고령화에 향후 더 하락
구조개혁 통해 생산성 높여야"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2019~2020년 중 2.5~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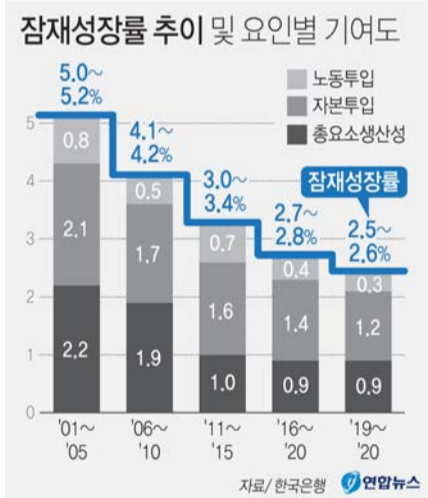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9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9~2020년 중 2.5~2.6%로 지난 2016~2020년 중 2.7~2.8%보다 약 0.2%포인트 낮아졌다. 2016~2020년 잠재성장률도 기존 추정치(2.8~2.9%)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특히 2001~2005년 5.0~5.2%에 달했던 한국 잠재성장률은 불과 18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빠졌다는 얘기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수록됐던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담았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한 나라의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분기 자료를 토대로 2001년부터 잠



재성장률을 재추정했다. 지난 3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15세 이상 인구의 정점시기가 2033년에서 2031년으로 단축되는 등 인구추계 결과가 새롭게 바뀌고, 국민계정통계 기준년 개편으로 2001~2018년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조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정에 반영했다.

잠재성장률 추정 방법이 있어서도 '노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투입을 '총취업자수' 기준에서 '총근로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함수모형, 준구조모형, HP필터링 등 3개 모형에 다변량필터링모형을 추가했다.

재추정 결과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 2019~2020년 2.5~2.6%로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9~2020년 추정치(2.5~2.6%)가 2016~2020년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사실은 잠재성

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최근에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노동투입 기여도는 2001~2005년 0.8%포인트에서 2016~2020년 0.4%포인트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을 제외한 것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혁신과 관계가 있다.

또 한은은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2016년 이후 노동투입 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했다"며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투자 둔화로 자본투입 기여도도 큰 폭 둔화했다"고 말했다. 자본투입 기여도도 같은 기간 2.1%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내려갔다.

문제는 향후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 주력산업의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추세적 투자부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올 실업급여 총 지급액 8조 육박

8월 지급액 7256억, 전년비 18% ↑

올해 구직활동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총 8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 규모가 커졌고, 정부의 사회적 전망 강화 기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회복과 공공행정, 보건복지 분야 신청자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7.8% 늘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매달 7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전체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8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총액이 6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 6조45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매월 구직급여 지급총액을 살펴보면 ▲1월 6256억원 ▲2월 6129억원 ▲3월 6397억원 ▲4월 7382억원 ▲5월 7587억원 ▲6월 6816억원 ▲7월 7589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8월까지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5조5412억원에 달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매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6000억원대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7조 9000억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